

타이랜드의 정치적·경제적 개관

安 清 市*

次>

- | | |
|--------------------|-----------------|
| I. 서론 : 역사적 전통과 특징 | 2. 부문별 경제 |
| II. 정부조직과 구성 | 3. 무역 및 대외 경제관계 |
| 1. 국왕 | 4. 문제점과 과제 |
| 2. 입법기관 | V. 대외관계 |
| 3. 내각 및 수상 | 1. 외교정책의 기조 |
| 4. 지방정부 | 2. 외교정책의 전개 |
| 5. 사법체계 | VI. 결론 |
| III. 정치과정 : 군과 정치 | 1. 전망 |
| IV. 경제현황 | 2. 한국과 타이랜드 |
| 1. 개관 | |

I. 서론 : 역사적 전통과 특질

타이랜드는 그 역사와 발전과정이 동남아의 다른 나라들과는 크게 다르다. 이 때문에 타이랜드는 정치전통과 제도화과정에 있어서도 주위의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이 나라는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서양의 식민주의지배를 적접적으로 받지 않은 채 전통사회에서 근대로 이행해 온 나라이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는 식민지 경험을 한 다른 나라에 비해서 反식민주의 및 민족주의적 감정이 비교적 약하고 서양을 보는 태도도 상당히 차이가 난다.

타이랜드는 또한 동남아의 다른 이웃 나라들에 비해서 2차대전의 피해와 그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점도 특기할만 하다. 주위의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2차대전 중에 점령되거나 큰 친화를 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웃들은 대개 2차대전을 고비로 해서 민족주의가 폭발하거나, 이 과정에서 독립을 쟁취하는 등 역사적 분기점을 맞이하였다. 이와 달리 타이랜드

* 서울대 정치학

는 일본에 잠시 점령당한 바는 있지만 전쟁의 직접적 영향을 비교적 덜 받은 나라다. 그러므로 전쟁과 종전의 여파가 이 나라의 국내정치에 준 충격도 비교적 덜했다.

타이랜드는 한 때 종전 처리과정에서 일본의 동맹국으로 취급되어 폐전의 책임을 지고—일본이나 독일처럼—강제로 민주헌정국가가 될 뻔 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전의 시발이 타이랜드인의 의사가 아니라 일본의 강압 때문이었다는 점과 대전 당시 「자유 타이랜드인 운동」을 벌였던 세력이 미국 등 연합국의 동정을 샀기 때문에 폐전국의 지위를 면하도록 허용되었다.

이러한 연고로 해서 타이랜드의 정치체제는 비교적 서서히 근대적 통치구조로 변모해 왔으며, 전통적·군주국가적 요소가 아직까지도 강하게 남아 있다.

역사적으로도 타이랜드는 17c~18c 동안 외부 세계와는 거의 절연된 상태에서 절대군주국가를 형성해 왔다. 이 시기에도 벼마와의 충돌, 몇몇 서양제국들과의 교역 및 선교사들의 내왕 등 외부세계와의 접촉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시의 외부적 자극과 교역의 여파는 전통적 정치체제의 변모에 영향을 미칠만큼 크지 못했을 뿐더러 오히려 중앙집권적 절대군주국가의 강화에 기여하였다.

왕조시대의 타이정치는 국왕, 왕족, 귀족 등으로 구성된 소규모 엘리트 집단내의 권력투쟁으로 점철되었고, 일상적 통치행위는 주로 귀족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관료조직에 의존하여 이루어졌다. 타이랜드의 관료는 일찍부터 강력한 중앙집권적 귀족주의하에서 권력과 부를 축적해 왔으며, 때로는 왕권을 견제하려는 귀족세력에 부합하여 여러가지 폐단과 부정의 온상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폐단을 절감한 국왕 츄라롱꼰(Chulalongkorn)은 한때 전통관료들의 권한을 축소하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서양식 관료제도를 도입하는 개혁을 단행한 적이 있었다. 이로써 한 동안 귀족계급이 왕권의 지배하에 놓여지게 되고 관료는 왕권에 의해 통제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19c~20c 초엽에 밀어 닥치기 시작한 외부세계의 문물과 정치·경제적 충격은 왕조 체제의 지속에 심대한 장애요인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절대왕조체제는 내부개혁을 도모하는데 실패한 채 드디어 1932년의 쿠데타로 무너져 버렸다(Chai-Anan, 1987:25-26).

군주제는 쿠데타 이후 입헌주의로 대치되었다. 입헌주의는 왕의 권한을

축소하는 대신 국민이 뽑은 의회에 통치권이 위임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실상 조직화된 이익집단과 근대적 정당배경이 허약한 의회주의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정치제도화의 바탕이 약하고 관료를 견제할만한 조직화된 세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관료조직은—후일 군부와 함께—타이랜드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부문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유산은 오늘날 까지도 타이랜드로 하여금 서구식 입헌정치를 수립하는데 성공하지 못한채 전통과 현대적 요소가 혼재한 복잡하고 불안한 통치구조를 지속하게 하고 있다. 1932년 이래 이 나라는 끊임없는 쿠데타와 수차에 달하는 헌법 개정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오늘날 타이랜드 정치의 골격은 1978년 12월에 채택된 헌법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타이랜드의 헌법은 1932년 절대군주제에서 입헌주의로 바뀐 후에 1978년까지 13번이나 개정되었다. 1978년에 확정된 헌법은 이 나라의 정치구조를 국왕을 국가의 수반으로 하는 민주정부 체제로 규정하고 있다. 이 입헌군주제는 국왕아래 상·하 양원의 입법기관을 두고, 행정부에는 내각을 사법부에는 법원을 두어 각기 국사를 독자적으로 관장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타이 정치의 실제 권한은 수상직에 집중되어 있다. 수상은 임기 4년으로 국왕이 임명토록 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직이나 정당을 반드시 가질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지금까지 타이랜드의 수상직은 군부지도자들이 거의 독점하여 왔다. 헌법이 이처럼 수상직을 군부가 차지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랜드의 야당 지도자들은 헌법이 비민주적이라고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구조가 곧 이 나라 정치의 실세를 반영하는 타협의 산물로 받아들이고 있다.

타이 정치는 이처럼 형식상으로는 의회정치를 표방하면서도 엘리트층에는 아직까지도 독재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엘리트와 대중이 괴리되는 정치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도 민주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 산업화가 급속히 진전되면서 이러한 전통에도 상당한 변화가 초래되기 시작했다. 산업화와 더불어 새로 운 사회세력들이 그 수와 목소리를 더해 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타이랜드 정치제도와 권위구조는 이들 세로이 형성되는 사회세력들과 정치권이 어떻게 조화로운 관계를 모색해 나가는가 하는데 키다란 과제를 두고 있다.

Ⅱ. 정부조직과 구성

타이랜드는 입헌군주국이다. 헌법에 의하면 타이랜드의 국가기구는 국왕을 정점으로 하고 그 아래 상·하 양원제로 되어 있는 입법기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 내각과 관료 및 지방정부, 그리고 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다. 1978년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타이랜드의 정부구조를 일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타이랜드의 정부구조(1980년)



자료 : Frederica M. Bunge, ed. Foreign Area Studies Handbook Series, *Thailand: A Country Stud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81) p. 179.

1. 국 왕

타이랜드의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른 민주국가의 헌법과 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권들은 일정한 테두리내에서만 보장된다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특징으로 지적될 만

하다. 즉 타이랜드 헌법 45조에 의하면 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와 자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가나 종교적 이익에 반하거나 국왕 및 헌법의 권위를 해치는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국왕에 대한 헌법조항이 국민의 기본권과 의무, 국가의 권능에 관한 조항들의 앞에 삽입되어 있는 사실도 이 나라의 정치전통의 일면을 들포이게 한다.

타이랜드의 정치는 1932년에 분수령을 맞았다. 군부와 관료가 연합하여 절대군주제도를 폐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채택하였다. 입헌군주제하의 국왕은 군림하되 다스리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서 타이랜드의 국왕은 당파를 초월하며 일상적 정치를 수상에게 위임하고 스스로는 정치와 초연한 위치에 서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서 국왕의 권위는 거의 절대적이며, 종종 상징적 범위를 넘어 현실정치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행사하고 있다.

타이정치에서 국왕이 행사하는 주요권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

첫째, 이 나라의 모든 입법·행정·사법 권한은 국왕의 이름으로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

- 국회를 통과한 새 법률의 서명
- 국회 또는 쿠데타 지도자들의 추천 또는 권고에 따라 수상을 임명하는 일
- 수상의 추천에 의해 각료, 고급공무원, 판사를 임명하는 권한
- 수상의 추천을 받아 불교계 수장과 최고 승려들을 임명하는 권한
- 정부관리 및 국민의 포상권
- 사면권 등

둘째, 국왕은 이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자로서 국가의 통합과 안정에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바, 그 중 가장 중요한 직책의 하나는 국군의 최고 통수권자로서 갖는 상징적 권한이다. 비록 상징적이긴 하나 이 권한은 여전히 군의 전통과 권위를 높히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며, 때로는 군의 행동을 자제시키는 효과도 갖는다.

셋째, 국왕은 외교의 수장으로서 사절을 영접하고 해외에 나라를 대표하

(1) Suchit Bungongkarn, "Political Institutions and Processes", in Somsakdi Xuto ed,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1987), pp.58-60, and *Far Eastern Economic Review* December 10. 1987 & January 21, 1988.

는 기능을 갖는다. 즉 국왕은 본국에서는 외국의 대사 및 외교사절을 인준 영접한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타이국민과 국가를 대표하며 국가의 전통과 권위 그리고 국권의 수호자로서 군림한다.

2. 입법기관

타이랜드의 국회는 양원제를 택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도록 헌법 74조에 규정하고 있다. 상원의 의원은 수상이 추천하고 國王이 최종 임명하도록 하고 있으며, 타이국적을 가지고 35세 이상의 정당소속을 갖지 않은 사람이어야 한다. 상원의 숫자는 하원의원수의 $\frac{3}{4}$ 을 넘지 못하도록 정해져 있고, 그 임기는 임명된 날자로부터 6년이다. 하원의원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는데, 25세 이상이 되어야 입후보 할 수 있고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있다. 하원의원의 수는 인구에 따라서 지방마다 다른데 그 수는 매 선거 이전해 말의 인구추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상·하 양원의 의장은 동료의원이 천거하면 國王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입법부의 권한, 역할, 책임 및 그 한계는 헌법규정에 따라서 정부 각부처의 업무를 다음과 같은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지휘·감독한다.

첫째는 입법권인데 헌법 76조에 따라서 “모든 법안은 입법부의 권고와 동의에 의해서만 효력을 발휘한다.” 이 법은 통치와 행정의 틀이 되는 것이다. 입법권은 의회의 활동 중에서 중추적인 것이다. 법안상정은 내각이 하는 경우와 의원이 상정하는 두 방법이 있다. 상정된 법안은 3동회를 거쳐 하원의 표결에 회부되며, 통과된 안은 다시 상원의 승인을 거쳐 가결된다. 만약 상원에서 부결되는 경우 그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보내진다. 이 때 하원이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시 이를 가결하면, 이 법안은 의회를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수상은 통과된 법안을 국왕의 재가에 회부한다.

둘째로 의회는 국정에 대한 청문권(interpellations)을 행사한다. 상원 또는 하원의원은 누구나 청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문신청은 상원 또는 하원의 관련 위원회의 의장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사실 또는 정체에 국한하여 허용된다.

셋째, 의회는 각료에 대한 불신임토의를 제청할 수 있다. 불신임제청에는 하원의원 $1/5$ 이상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불신임의 대상은 개별 각료 또는 내각 전원을 불신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불신임 동의안의 가결은 제적

의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넷째, 의회는 긴급조치 가결권을 갖는다. 국가비상시에는 국왕이 긴급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 이때 내각은 지체없이 그 조치를 의회에 회부해야만 한다. 국왕은 위급시에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에도 긴급조치를 선언할 수 있다. 이때 긴급조치의 내용은 관보에 게재된 후 3일 이내에 하원에 회부되어야 한다. 만약 하원이 긴급조치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또는 하원이 승인했으나 상원이 거부하는 경우 다시 하원에 회부되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경우 그 선언은 효력을 정지한다. 대신 상·하원 모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상원이 거부하더라도 하원의 재투표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경우 그 선언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다섯째로 상·하 양원은 다음의 경우에 동의권을 갖는다. 섭정자의 임명, 국왕의 승계, 90일의 회기 이전에 의회를 폐회할 경우, 선전포고, 주요 국제조약의 체결, 법에 정한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설립할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의회의 운영은 각종 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위원회는 각기 구성과 임무가 다르며,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하원의원들로 구성된 상임위원회
- 하원의원 또는 기타 비의원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 상·하 양원의원 또는 비의원들로 구성된 합동위원회

3. 내각 및 수상

타이랜드의 내각은 수상과 50인 이내의 각료로 구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수상은 입법부의 대표인 상원의장이 천거하여 국왕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관례상 상원이 군부지도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한다면 그 의장이 지명하는 수상은 사실상 군부 대표나 다름없다. 지난 수십년간 수상이 군부 쿠데타의 주도자들 중에서 나온 것은 이러한 사정을 잘 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법적으로는 수상 이하 내각이 국회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사실상 타이 정치는 수상을 정점으로 한 행정부—내각과 관료—가 거의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타이랜드의 수상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는 최고 지도자로서 사실상 군림한다. 수상은 국왕의 칙령에 부서하는 권한을 비롯해서 국가의 안위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비상대권을 독자적으로 취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고위직의 임명, 감사, 집행권도 수상이 사실상 전권적으로 행사한다. 물론 이 모든 권한은 국왕의 위임과 재가를 요하지만 실상 국왕의 권한은 상징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수상 아래에는 다른 나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행정 각부의 장관들이 방대한 관료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들이 흔히 그렇듯이 타이랜드의 행정은 관료조직이 장악하고 있으며, 공무원들은 통상 최고 엘리트 직종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최근에는 경제성장으로 말미암아 민간 경제와 산업 쪽에도 적지 않은 고급인력이 몰려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이 나라의 고급인력들은 관료와 군부쪽을 선호하고 있어 그만큼 군과 관료쪽이 특권적 지위를 누리면서 엘리트 자리를 독차지하고 있음을 뜻한다.

4. 지방정부

지방정부는 지방행정조직과 자치기구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급 자치단체에는 민선의회가 설치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집권의 전통이 강한 이 나라의 지방조직은 사실상 중앙정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과 다름 없다. 잦은 정치불안사태와 근대화 과정은 이 나라에도 지방정치의 국유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오늘날 타이의 지방정치조직은 내무성의 관료조직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

타이랜드에는 전부 72개의 省(province: changwat)으로 구역되어 있고, 이는 다시 642개의 區(district: amphoe), 61개의 分區(subdistrict: king amphoe), 5,505개의 콤泯(commune: tambon)과 49,178개의 洞(village: muban)으로 갈라져 있다. 또 특별자치구(municipality: tesaban)에 해당하는 118개의 시(nakorn), 읍(muang) 등과 694개의 위생구(sanitary district: sukhapiban)가 있다.⁽²⁾ 지방정부들은 이론상 자치가 허용되고 있지만, 독자적인 조세권이 허용되지 않을 뿐 아니라, 통치권능이 중앙에 예속되어 있어 사실상 중앙정부의 행정관료들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다.

(2) 타이의 지방정부조직과 구조에 대하여는 다음을 참조. Likhit Dhiravegin "Thailand", Chung-Si Ahn ed., *The Local Political System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987), pp. 137-172.

5. 사법체제

타이랜드의 사법체제는 전통과 현대가 합친 아말감같은 조직과 절차를 가지고 있다(Bunge, 1981:183-184). 이나라 법문화의 뿌리는 오랜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온 절대왕조 치하의 관습과 법의식에 크게 기초하고 있다. 오늘 날까지도 이러한 전통은 이나라의 가족제도, 상속제도, 종교생활 등 여러 분야에 그 모습을 남기고 있다.

한편 근대적인 법제는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 빌어온 것이 많고, 일부는 인도, 일본, 중국, 미국 등에서 영향입은 것들도 있다. 형법, 사법, 상법 등의 법제는 주로 이러한 근대적 법제도에서 따온 것들에 속한다.

재판소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등 三급심체를 택하고 있다. 사법 업무는 법무부와 사법위원회(Judicial Commission)의 두 독립기관이 분할 관掌하고 있는데, 법무부는 사법행정과 인사관리, 사법제도의 개혁 등을 관掌하여, 사법위원회는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법관의 임용과 사면, 처벌 등은 이 위원회가 관掌한다. 법관의 임기는 60세이며, 5년간 연장 가능하다.

III. 정치과정 : 군과 정치

리그스(Fred Riggs) 교수는 오래전 타이랜드의 정치를 관료가 지배하는 “관료정치 모델”로 설명한 바 있다(Riggs, 1966). 타이의 관료기구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다. 정당정치와 사회조직이 약한 상태에서 관료조직이 매우 높은 정치적 독자성과 행정 및 재정상의 재량권을 지니고 있어 과히 관료국가적 성격이 강하다. 그동안 여러 차례의 정치적 변혁과 현법구조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관료제는 크게 흔들리지 않고 수세기 동안 지켜온 전통을 비교적 잘 유지해 왔다.⁽³⁾

그러나 최근 수십년간 타이랜드의 정치는 군부가 핵심적 위치에서 관료를 지배해 왔거나 직접 권력을 장악해 온 소위 “프레토리안 정치체제”(Praetorian political system)에 더욱 가깝다. 헌팅턴(S. Huntington), 펠무터(Perl-

(3) 타이랜드의 관료제에 관하여는 Chai-Anan Samudavanija, “The Bureaucracy” in Somsakdi Xuto, ed., *op. cit.*, pp. 75-109 참조.

mutter) 등에 의하면 프레토리안 정치는 군이 정치에 개입하여 좌우하거나 행정부를 장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항상 지니고 있는 정부이며, 군이 사회 세력의 핵심적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체제를 일컫는다(Huntington, 1968; Perlmutter, 1977).

군은 타이의 정치에서 가장 핵심적 권력계급을 이루고 있다. 정부의 최고 지도자들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군부출신이거나 적어도 군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충원되어 왔다. 뿐만 아니라 헌법구조변혁을 비롯한 주요 정치제도의 개혁과 운영에도 군부의 입김이 항상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타이정치는 아마도 동남아에서—인도네시아와 함께—프레토리안체제에 속하는 대표적 예라고 할만하다.⁽⁴⁾

1932년의 혁명으로 군부가 정치일선에 등장한 이후 이 나라에는 평균 5년에 한차례 정도로 잣은 쿠데타 기도가 있었다. 그리고 9번에 걸친 권력의 교체가 모두 군부쿠데타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 나라의 정치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수상직은 대대로 현역 또는 전임 군부요인들이 독점해 왔다. 지금까지 타이에서는 군부의 지지와 보호를 받지 않으면 사실상 누구도 수상직을 원만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임명직에 해당하는 上院의원의 다수도 군부출신이며, 주요 정당의 간부 중에도 군출신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한다.

타이랜드는 이웃나라들에 비해 외적에 의한 위협이 비교적 적고 국내의 반란분자나 전복세력이 약하다. 이에 걸맞지 않게 방대한 조직과 인원을 가진 군부는 그 역량을 유지하고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수호와 발전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임하고 나서기도 한다. 1960년대부터 군부는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농촌개발계획에도 깊숙히 개입하기 시작했다. 군은 자원과 인력을 투입하여 지방주민들의 정치적 후원자로서 위치를 굳히고자 했다. 또 이 과정을 통해 군부는 지방관서와 행정 및 정치엘리트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도 했다.

군부의 오랜 정치적 지배는 우리나라 헌정질서의 제도화를 해치고 정치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1932년 이래 1982년까지 헌법이 13번이나 제정

(4) 최근의 타이군부와 그 정치적 역할에 관하여는 Suchit Bunbongkarn, *The Military in Thai Politics, 1981~198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1987) 참조.

되었고 7번 개정되었다. 13번 중 8번이 쿠데타로 비롯되었으며 1947년 이후에는 쿠데타가 날때마다 새 헌법이 탄생되었다. 이중 민주적 헌법개정은 세번에 불과하였으며 단지 6년 2개월간 민주적 헌법이 실시되었다.(Chai-Anan, 1986:247) 헌법개정의 실질적 이유는 물론 집권군부 지도자들의 재집권 내지는 혼상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1932년 이래 타이랜드는 총 45년을 군부 및 군부지배정부의 집권하에 있었다. 민간정부가 통치한 기간은 도합 10년이 채 안된다. 그동안 이 나라에는 적어도 42번 이상의 내각경질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23번은 군부가 독점통치한 군사정부였으며, 5번은 군부가 주도한 민간정부였고, 순수한 민간정부로 조직된 내각은 14번이었다. 그런데 이들 14개 민간내각은 모두 불안정하여 단 1개만이 1년 이상 지속했고 나머지는 평균 4.5개월에 불과한 단명내각으로 끝났다. 물론 이들은 대부분 군부의 쿠데타로 전복되었다.(Chai-Anan, 1986:249-251).

오랜 군부통치는 정당정치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근대적 정당정치의 개념이 타이랜드에 소개된 역사는 50여년이 넘었다.⁽⁵⁾ 그러나 이 나라의 정당정치는 아직까지도 크게 발전되지 못한 상태에 있다. 군부와 관료의 힘이 정치를 좌우할 만큼 막강한 사회에서는 정당의 역할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 1932년 쿠데타 이후 1946년까지 존속한 헌법에는 의회가 설치되었어도 의원은 정당을 배경으로 선출된 것이 아니었다. 의회의 반은 선거, 반은 임명에 의거하였으며 의회의 기능이나 입법과정은 군부 관료통치의 수단에 지나지 못했다. 게다가 타이랜드의 군부지도자들은 정당활동 및 민간 정치인들을 불신하는 풍조가 강하다. 군부는 정치인들이란 서로 분열하여 싸움이나 일삼기 때문에 나라의 정치를 불안정하게 하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주범들이란 강한 불신의식을 가지고 있다. 정당정치의 약체화와 의회주의의 실패는 1932년 이래 계속되어 온 현상으로 관료주의의 강화와 행정부 위주의 정치전통이 낳은 부산물이기도 하다. 1978년 이래 상원의원의 임명권이 사실상 수상에게 주어짐으로써 입법부의 권능은 더욱 약화되고 행정부 독점화 현상은 더욱 강화되어 왔다. 주요한 법안은 주로 행정부가

(5) 타이 정당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는, Kramol Tongdhamachart, *Toward a Political Party Theory in Thai Perspectiv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 No. 68 (Singapore: Maruzen Asia, 1982).

제안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단면을 보여주는 예이다. 뿐만 아니라 상·하 양원의 권한과 영향력도 서로 균형이 되도록 하여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정당정치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하원이 상호 견제하도록 하고 있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오늘날 타이랜드에는 여려개의 정당들이 난립하고 있어 어느 한 정당도 의회에서 단독정부를 구성할 만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1986년 총선거에서는 민주당(Democratic Party)이 주도하는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그러나 각료적 안배를 둘러싼 민주당내의 파벌과 연립정당간의 내분 때문에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Neher, 1988:197-198). 그 결과 가장 최근에 있었던 1988년 7월 24일 총선거에서 민주당은 제 3 당으로 밀려나고 차트타이(Chart Thai; Thai Nation)당이 튼튼한 재력을 바탕으로 제 1 당으로 부상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단독정부를 구성할 만큼 의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이처럼 타이랜드의 정당은 국민적 기반을 결한채 뚜렷한 리더쉽과 정책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군부지배에 눌려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상태에 있다. 정당정치가 뒷받침되지 않은 타이의 의회도 상대적으로 약체에 머물고 있음을 물론이다.

군부가 오랫동안 정치과정의 헤게모니를 장악해 온으로 말미암아서 타이

〈表 2〉 타이의회의 정당별 의석분포

	1988. 7. 24 총선 이전 의석수
집권연립정당	
Democratic Party	99
Chart Thai	64
Social Action	51
Rassadorn(Citizen)	20
소 계	234
야당	
United Democratic Party	38
Prachakorn Thai	25
Ruam Thai	19
Community Action Party	14
Others	17
소 계	113
총합계	347

자료 :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88. 5. 12.

랜드의 정치제도와 민주적 참여기구는 지금까지 저발전된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민간정치제도는 그동안 군부의 세력에 밀려 힘을 못쓰거나, 그나마 조직력이 약하고 내부 분열이 심해 국민의 지지를 받는데 실패했다. 따라서 군부에 대한 견제 및 대응세력으로 자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전통질서의 관례와 불교문화의 유산으로 인해 이 나라의 정치문화는 비참여적, 권위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군부지배를 더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타이국민의 대부분은 아직까지 강력한 지도력, 집권화된 행정권을 선호하며 안보와 국방의 중요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높히고 군부지배를 지속시키는데 간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군부가 헤게모니를 쥐고 정치과정을 주도하며, 정당과 의회가 미쳐 제도화되지 못해 현정질서가 불안정 상태를 노정하는 가운데서도 타이랜드의 정치는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따라서 다른 이웃나라나 우리에 비해서 체제가 급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권위의 단절이나 부재현상으로 인한 문제도 상대적으로 적게 안고 있다. 이 나라의 정치가 이러한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군주제의 전통이 그만큼 지속성과 권위보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956~1960년대 군부지도자들은 쿠데타로 장악한 정권의 권위와 정당성을 끌어 올리는데 국왕의 지지를 필요로 했다. 이들은 나라의 정체와 국가의 권위를 높히기 위해 국왕을 받들고 국왕직을 보다 권위있고 존경스런 위치로 만들고자 했다. 이때부터 1932년 이래 실권에서 밀려 뒷전에 있던 국왕적이 다시 국민의 주목을 끌게되고 국왕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사실상 국왕은 헌법이 규정한 공식적인 권위를 떠나 개인적인 자격으로 국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여러가지 활동을 통해 대중과 가까이 하고 있다. 특히 현 국왕 뷔이볼(Phumibol)은 농민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많은 봉사활동에 종사함으로써 대중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다. 그는 대지주들을 독려하여 정부의 농지개혁정책을 지지하게 하고, 스스로의 땅을 농민에게 분배하기도 하였다. 또한 손수 농사법을 개량하고, 모범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전파하는가 하면, 낙농업을 독려하기도 하였다. 여러가지 봉사활동을 위해 국왕 및 그 가족은 매년 농촌지역에 100여회 이상 나들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국왕은 방콕지역의 슬럼가 개선에 착수하는 등 국가의 발전 전략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과 더욱 가까이 하고 있다. 오늘날 발달된 매

스콤 기술에 힘입어 국왕의 이러한 활동은 국민에게 잘 홍보되고 있다. 현재의 국왕과 왕비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국민과의 거리를 좁히는데 성공하였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보면 국왕은 정치에 초연하여 존재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중요한 정치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정치학자 수쿰반트(Sukhumbhand) 교수는 국왕의 이러한 기능때문에 타이랜드의 정치는 빈번한 쿠데타, 계속되는 갈등과 충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전통을 보전하고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폴이한다(FEER, 1988. 1. 21). 양극화의 현상이 심하고 갈등의 조정 장치가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타이랜드의 정치에서 군주제는 종종 위기에 대처하여 최종갈등 조정역을 담당하거나 국가화합의 구심점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국왕의 이러한 권능은 현 부미볼의 개인적 스타일과 “민주적 국왕”으로서의 능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다음 세대에도 이러한 역할이 지속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는 이들도 있다.

1960년대부터 성장하는 경제와 새로이 등장하는 사회세력들은 개혁과 참여를 부르짖고, 때로는 군부의 정치적 역할을 반대하고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들은 군부세력을 견제할 만큼 강력하지도, 그 경쟁 상태가 될 만큼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있다. 급속한 산업화와 경제성장에 힘입어 수와 세를 더해가고 있는 압력집단, 기업조직, 학생, 근로자들의 도전 앞에 군부지배의 타이정치가 얼마나 더 오래 지탱해 갈 수 있는지는 확실치 않다. 그러나 번성일로에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 볼 때 군주제를 안전판으로 해서 점진적 개혁을 표방하고 있는 이 나라의 현존 정치체제와 과정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동안 안정 속의 변화를 누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IV. 경제 현황

1. 개관

지난 10여년간 타이랜드의 경제는 비교적 안정된 성장을 기록하였다. 특히 최근에 이르러서는 공업부문이 급속히 발달하고 제조업부문과 수출이 성장의 주축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타이랜드는 한국, 대만, 싱가폴 등에 이어 아시아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NICs 국가로 손꼽히고 있다.

<표 3>은 최근 타이랜드 경제의 대표적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1987년 타이의 경제성장율은 GDP 기준으로 6%를 넘고 있다. 이는 같은 해 세계의

평균성장율인 2.8% 보다 두배나 높은 지수이며 1986년의 성장을 3.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다. 1988년의 GDP 성장율은 1987년보다 약 2배나 높은 11%를 기록하였다. 1989년에도 타이 경제는 높은 성장을 계속하여 약 8.9%의 성장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부문을 보면 가뭄과 홍수 등 기후조건 때문에 1986~1987년 사이에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어 팽창하는 공업 및 서비스 분야와의 격차가 더욱 늘어났다.

수출은 지난 3년간 매년 약 20%씩 늘어나고, 수입도 급속히 증대하여 이 나라 경제가 대외무역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나라는 아직 까지 고용정책이 미비하고 소득분배의 불균등으로 성장의 혜택이 골고루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모든 경제활동이 방콕에 집중되어 있는 등의 문제를 안고 있기도 하다.⁽⁶⁾

2. 부문별 경제

〈농업〉

이 나라 산업의 주종은 농업이다. 고용인구의 60% 가량이 아직도 농업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은 이 나라 GDP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1970년부터 공업 및 서비스산업에 비해 농업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쇠퇴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 나라의 농업은 국민의 생계에 일차적으로 중요한 산업이다.

타이랜드는 농산품의 대부분을 자급자족하고 있을 뿐더러 많은 잉여농산물을 해외시장에 수출하고 있다. 특히 1986·1987년에는 나쁜 기후조건으로 농산품의 수확량이 전년도에 비해 각각 0.3%, 1%씩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산품 수출액이 이 나라의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까지 상당히 높다.

쌀은 타이랜드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작물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미국과

(6) 최근의 타이경제사정에 대한 조사는 다음 자료들에 주로 의존하였으며, 편의상 개별적인 각주를 생략하기로 한다.

Ananda Rajah, "Thailand in 1986: Change and Continuity, Yet Again,"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Southeast Asian Affairs*, 1987 (Singapore, 1987), pp. 307-326.

Ruangthong Chaiprasop, "The Thai Economy in 1987: An Overview,"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Singapore, 1988), pp. 287-294.
Far Eastern Economic Review (January 12, 1989), p. 58.

〈표 3〉 타이랜드의 주요경제지표(1986, 1987, * 1988*)

Item	Year		
	1986	1987	1988
Population(millions)	52.96	54.02	n.a.
Annual change(%)	(2.3)	(2.0)	n.a.
GDP, annual change(%)	3.6	5.6~6.6	5.8~6.2
Agriculture	-0.3	-1.0	4.5
Industry ¹	6.7	9.7	7.9
Services ²	4.3	6.4	5.1
Exports(annual change, %)	20.7	23.1	14.1
Imports(annual change, %)	-3.0	29.6	17.4
Trade account(1,000 million baht)	-14.4	-33.6	-48.9
Current account(1,000 million baht)	6.5	-10.1	-23.9
Inflation(%)	1.9	2.8	3.8~4.0
Unemployment(%)	6.8	6.8	n.a.
Open unemployment	3.0	2.8	n.a.
Underemployment	3.8	4.0	n.a.

¹ Including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² Including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s, wholesale and retail trade, banking, insurance, and real estate, ownership of dwellings,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and other services.

* Estimated.

** Projected.

n.a.=Not available.

Sources: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Board(NESDB); Bank of Thailand.

자료 : Ruangthong Chaiprasop, "The Thai Economy in 1987: An Overview",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 288.

오스트랄리아 등지의 쌀 생산이 증대하여 국제가격이 하락한데다 이웃의 주요수입국들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등이 모두 자급자족 정책으로 돌아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쌀 다음으로 중요한 경제작물은 타피오카, 옥수수, 고무, 설탕 등이다. 쌀과 마찬가지로 세계 시장의 가격 인하로 이들 농산품의 경제 및 무역에 대한 기여도도 최근에는 감소하고 있다. 1986년의 타피오카 생산량은 6백만 톤으로 전년에 비해 2백만톤이나 줄었다. 옥수수 생산량도 1986년에는 전년에 비해 20%나 떨어졌다. 1986년의 고무생산량은 1985년보다 5% 가량 증가하였으나, 설탕 생산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었다.

타이의 농업부문은 공업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고 농산품 수출이 타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표 4〉에

〈표 4〉 GDP에 대한 부문별 점유율(1970, 1980 및 1987년)
(As a percentage of GDP at 1972 prices)

Sector	Year		
	1970	1980	1987
Agriculture	32.2	24.8	20.9
Industry ¹	24.1	29.9	31.1
Services ²	43.7	45.3	48.0

¹ Including mining, manufacturing, construction,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² Including communications, transport, wholesale trade, banking, ownership of dwelling, public administration, and other services.

Source: NESDB.

자료: Ruangthong Chaiprasop, "The Thai Economy in 1987: An Overview,"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 290.

서 보듯이 1970년까지 이 나라의 농업은 GDP의 32.2%를 차지하여 공업부문의 24.1%보다 큰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1980년부터는 그 비중이 뒤바뀌어 공업부문이 앞서게 되었으며 1987년 그 격차는 20.9%에서 31.1%로 크게 벌어졌다. 국제시장 및 가격면에서도 농업생산품은 공업품보다 불리한 여건에 처해가고 있어 농업발전에 불확실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러한 도전에 직면하여 오늘날 타이의 농업정책은 그 구조적 개혁을 요청받고 있다.

〈공업부문〉

공업부문은 이 나라의 경제에서 가장 빨리 성장해오고 있는 산업이다. 공업부문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에 24.1%, 1980년에 29.9%, 그리고 1987년에는 31.1%로 늘어났다. 최근 3~4년간 공업부문의 성장률도 매우 높아 1986년에는 4.7%, 1987년에는 7.6%의 실질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공업성장을 촉진하는 일차적 요인은 수출주도형 산업이다. 이 나라의 수출은 1986년과 1987년 각각 20.7%, 23.1%라는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제조업분야 수출은 1987년 현재 37.9%나 성장하였다. 타이의 대표적인 수출산업은 섬유제품들이다.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섬유제품은 세계시장에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다. 전설산업도 최근들어 매우 활발하게 팽창하고 있다. 〈표 5〉에서 보듯이 전설산업은 1986년도에 0.7%의 성장률에서 1987년 갑자기 9.2%나 성장하였다. 1986년에 침체했던 전설업이 갑자기 활기를 띠게 된 것은 경제사정이 밝아지고 이

〈표 5〉 부문별 실질성장 기여도

1986, 1987(At 1972 Prices)

Industrial Origin	Year	
	1986	1987
Agriculture	-0.3	-1.0
Industry	4.7	7.6
Mining and quarrying	1.4	4.5
Manufacturing	6.7	9.7
Construction	0.7	9.2
Electricity and water supply	6.9	11.0
Services	4.3	6.4
Transport	5.2	6.2
Wholesale	3.9	5.2
Banking	1.0	7.7
Ownership of dwelling	3.9	4.0
Public administration	2.4	-0.4
Other services	7.0	9.7
Gross domestic product	3.6	5.6

Source: NESDB.

자료 : Ruangthong Chaiprasop, "The Thai Economy in 1987: An Overview,"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 288.

자율이 떨어져 주택과 공장건물에 대한 수요가 팽배해졌기 때문이다. 한 때 이 나라에는 주택 수요가 급증하여 철관, 전선, 수도관, 페인트 등 건축자재의 품귀현상까지 일어날 정도였다.

〈서비스 부문〉

서비스부문은 이 나라의 GDP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1987년 현재 48%), 이 부문의 산업성장을도 만만치 않아 1986년에 4.3%, 1987년에 6.4%의 성장을 보이고 있다. 1987년에는 특히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여 해외관광객 수가 처음으로 400만이 넘었고 관광수입만도 400억 바트(baht)를 넘어 호텔방이 매진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서비스업종 중에서 관광외에 최근에 크게 성장한 부문은 은행, 교통업, 도소매업종 등이다(표 5 참조).

3. 무역 및 대외경제관계

비교적 불리한 세계시장환경 중에서도 타이의 무역은 최근 날로 신장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수출확대의 원인은 이나라의 정부와 민간기업들이 새로운 시장개척에 노력한 결과이며, 상품의 질적개선과 외환정책의 성공에도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87년 무역은 전년대비 23.1%가 증가 2,850 억 바트를 기록했다. 타이 상무성에 따르면 부문별 수출비중은 농업생산품 27.4%, 어업생산품 6.1%, 광산물 2.1%, 농공업품이 15.1%, 공산품이 62.4%, 기타 1.4%로 나누어진다. 주요 수출품목은 쌀, 고무, 옥수수, 타피오카, 텅그스텐, 설탕, 면직물, 보석류, 집적회로(integrated circuit) 등이다.

수출 증가에 맞서 수입도 1987년 29.6%가 증가하였다. 경기가 호전되자 투자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자본재 및 중간재에 해당하는 기계제품, 철, 유류제품 등에 대한 국내소비가 확대되어 수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 결과 단기적 무역수지가 악화되어 1987년 현재 총 무역적자는 전년에 비해 200% 이상이 증가한 336억 바트에 달했다.

한편 해외투자도 매우 활발하게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1987년의 신규 플랜트 투자는 전년대비 3배를 기록하였고, 기존 플랜트 확장율도 16%가 증가했다. 바야흐로 이 나라는 동남아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대상국의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는 정부의 활발한 투자유치 및 보호정책과 아울러 값싼 노동력, 안정된 정치환경 및 에너지 가격의 안정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근래에는 특히 일본과 대만의 화폐가 급속히 평가절상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투자가들이 타이랜드로 많이 몰려오고 있다.

4. 문제점과 과제

지난 3~4년간 타이랜드의 경제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활기있고 안정된 성장세를 기록하여 사회안정의 바탕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고도성장과 부문 간의 부조화에서 생기는 문제점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타이의 경제가 안고 있는 대표적인 문제점은 농업과 공업부문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겐이다. 정부의 고도성장책과 수출증진 등에 힘입어 공업분야는 급속히 성장해오고 있으나 농업부문은 작황의 부진, 시장조건의 악화 등으로 인해 오히려 뒤쳐지고 있는 상태이다. 농업성장율은 지난 5년간 평균 2%에도 미치지 못했다. 그 결과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빈곤, 계절실업과 불안정 고용, 불평등현상 등이 심각

한 사회문제로 야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방콕과 타지역 간의 격차 및 지역간의 불평등도 점점 가중되고 있다. 해외투자의 대부분과 국내 신규투자는 거의 방콕 및 대도시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기존의 기업들도 투자와 판매 등 혜택이 집중된 방콕주위에 몰려있다. 한 예를 들면 1987년 투자 지원의 혜택을 받은 기업 중에서 65%는 모두 방콕 또는 그 주변에 몰려 있었다.

높은 경제성장율에도 불구하고 타이경제는 농촌지역의 불완전고용 및 도시지역 고급인력의 높은 실업율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타이의 농촌은 적어도 8배만 이상의 유휴인력 및 불완전고용인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농촌지역의 빈곤과 높은 불완전고용구조는 인구의 과다한 도시유입을 초래하여 수도 방콕을 비대화시키는 원천이 되고 있다.

한편 도시의 고급인력 실업율도 매우 높은 편이다. 최근 활발한 경제성장에 힘입어 고급인력의 고용은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도시 고급인력의 실업율은 아직까지 4.4%(1986년)나 되며, 90년대 중반까지도 계속 늘어날 추세로 예측되고 있다.

농업과 공업부문간의 격차, 산업분야간에 벌어지는 소득격차, 방콕과 타지역 간의 격차를 줄이는 문제는 모두 타이 경제의 구조적 모순과 결부되어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 정부와 경제주체들은 지금까지 쌓아온 성장과 안정기조를 유지해 가면서 농촌의 개발, 부문간 소득분배 구조의 개선, 획기적인 고용책을 구사해 나가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V. 대외관계

1. 외교정책의 기조

강대국들 주위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식민주의에 희생됨이 없이 나라의 독립을 보전해 온 타이랜드의 대외관계는 그 유연함과 실용주의적 노선을 오랫동안 잘 지켜온 것으로 유명하다. 주위의 강대국들이 부침할 때마다 타이는 강자들과의 직접 대결을 피하고 이들과 협력하거나, 때로는 변화하는 세력균형을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왕국을 보전하고 국가의 실리를 도모해 왔다. 2차대전 후 냉전기간동안 양극화된 세계질서와 군사동맹체제 하에서 전통적인 타이의 외교기조는 한동안 친서방 동맹외교에 치우쳐 그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했다. 그러나 1970년대 미국과 중국의 화해 및 월남전 종결 등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국제정치가 다원화되자 타이랜드의 외교는 다시 그 역사적·전통적 기조를 되찾아가기 시작했다.

타이랜드의 외교정책은 강대국과의 관계에서는 등거리 정책(equidistance policy)을, 동남아 지역내에서는 지역연대(regional solidarity)를, 그리고 양자관계에 대해서는 실리(pragmatism)와 타협(compromise)을 중시한다.

등거리정책은 강대국의 어느一方에도 치우침이 없이 모든 나라와 친교를 맺고 협력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지역연대는 약소한 지역국가들이 힘을 모아 공동의 번영을 꾀하고 외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다. 지역연대를 위한 타이외교의 주축은 오늘날 ASEAN 각국을 캄보디아문제에 대하여 통일된 입장으로 이끌어내는 일에서 잘 성공하고 있다. 실리와 타협의 원칙은 이나라가 국제사회의 변모에 민첩하게 대처하면서 명분에 집착하기보다 국익을 추구하는 대외정책을 펴오도록 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외교정책의 기조가 전개되어온 과정을 개관하고자 한다.⁽⁷⁾

2. 외교정책의 전개

2차대전 후 70년대 이전까지 타이 외교의 주안점은 공산주의를 격리하고 특히 중공으로 부터의 위협과 불안감을 관리하는데 두어왔다. 베마와 라오스의 국경선 근처 160km의 거리에 중공을 두고 있는 이 나라는 중공으로부터 오는 영토적 위협과 함께 방콕지역의 상권을 잡고 있는 중국화교들에 대한 깊은 우려와 불신감이 겹쳐 역사적으로 오래된 對中國 공포증을 가지고 있었다.中共의 6.25 참전 및 東南亞諸國의 반란세력에 대한 원조 등은 이러한 위협의식을 더욱 촉진시켰다. 게다가 1950년대 중반에는 인도차이나로부터 불란서가 축출되고 월남이 분단되는 등의 사태가 동남아에서 벌어져 공산주의에 대한 타이의 위협을 더욱 고조시켰다.

그 결과 타이랜드는 냉전기간 동안 줄곧 反共產主義 외교정책을 표방하고 전통적·中立的 입장을 포기한채 서방, 특히 美國의 보호에 의지하는 친서방 정책을 견지해 왔다. 그 한 예로 타이는 1954년 동남아국가조약(SEATO)과

(7) 타이랜드의 외교정책에 대하여는 다음 자료들을 주로 참고하였음. Frederica M. Bunge, ed., *op. cit.*, pp.205-211; Kusuma Snitwongse, "Thailand's Year of Stability: Illusion or Reality"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pp. 280-285.

마닐라조약(一名 東南亞集團防衛條約)에 가입하였다. 1962년 타이는 또한 美國과 Rusk-Thanat Communiqué를 통해 양자 방위조약에 준하는 보호를 얻어내기도 했다. 요컨대 1960년대까지 반공산주의와 안보위협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타이의 외교노선 이었던 중립과 등거리노선을 밀어낼만큼 강력하였다.

한편 국내 안보와 국방위협에 대한 타이의 대외정책은 비공산 이웃나라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지역협력의 기반을 확대하려는 노력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은 1961년 필리핀, 말레이시아와 함께 동남아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 ASA)을 탄생시켰다. 그 후 1967년 이 기구는 인도네시아 싱가풀을 합쳐 새로운 지역협력기구인 동남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sst Asian Nations: ASEAN)으로 성장하였다. 오늘날 이 기구는 동남아지역의 협력과 안보에 필수적인 지역협력체제로 발전하였다.

1960년대 말까지 서방측 특히 미국과의 동맹 및 원조관계에 주로 의존해 왔던 타이의 외교는 1970년대에 들어오면서 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다. 먼저 1968년에는 영국이 1971년까지 스웨즈 운하 동쪽으로부터 군사력을 철수하기로 선언하였고, 뒤이어 미국의 존슨(Lyndon B. Johnson) 대통령은 월맹에 대한 폭격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을 추구하는 정책으로 선회하였다. 이어서 1969년에는 닉슨(Richard M. Nixon)이 타이를 방문하여 대아시아 철군계획을 제시한 후 곧 “Nixon Doctrine”을 발표하였다. 이 때부터 타이 외교는 中國, 북베트남, 북한 등을 포함하는 공산주의 국가들과 교섭을 터고 평화적 공존을 도모하는 새로운 정책으로 서서히 선회하기 시작했다.

1970년대 초부터는 타이의 대외관계를 보다 급속하게 탈냉전화시킨 사태들이 연거펴 터져나왔다. 1971년 4월에는 美國의 탐구팀이 중국에 초청되어 이른바 「핑퐁외교」라고 불리는 美·中共관계의 데탕트 무드가 형성되었고, 뒤이어 7月에는 닉슨의 중공방문 계획이 발표되고, 10月에는 中國의 UN 가입이 확정되었다. 美國의 철군으로 동남아에 힘의 진공상태가 예상되고, 中國이 새로이 부상하게 되자 타이의 대외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게다가 미국과 북베트남이 휴전협정에 합의하는 등 동남아 지역의 세력판도에도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타이랜드도 1972~1973년부터 중국 및

베트남과 관계수립을 모색했다. 우선 1974년 중국에 대표단을 파견, 주은래 수상으로부터 中國은 타이내의 공산주의 반란군에 원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1974년 12월에 타이는 15년동안 지속해오던 對中國 무역 금지조치를 철폐하였다. 이어서 1975년 7월에는 양국 사이에 외교관계가 수립되었다.

한편 베트남이 동남아의 강자로 부상하게 되자 타이는 이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고자 했다. 그런데 베트남과 관계를 수립하려면 우선 미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만 했다. 북 베트남의 교전당사국인 美國의 군대가 타이에 주둔하고 있는 한 베트남과의 관계정상화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이랜드는 이 때부터 미국군의 철수를 종용하고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정책(equidistance policy)을 적극 들고 나오기 시작했다. 1975년 이후 베트남이 동남아지역의 패권을 노려 인도지나반도의 공산화를 기도하고, 이어서 中國과 베트남관계가 악화되는 등 새로운 사태가 전개되었다. 그 후 캄보디아전쟁, 난민문제 등으로 타이와 베트남의 관계는 다시 맹각되었다. 그러나 타이랜드의 강대국에 대한 등거리 정책은 계속되었다. 그 일환으로 타이는 소련과도 가까워지기 시작, 1975년에는 처음으로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소련이 제공하는 원조 계획을 받아들이기로 수락하기도 했다.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타이의 외교는 개방정책을 더욱 확대하여 이념과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들과 대화의 통로를 확대하고 기능적 협력관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그 일환으로 첫째, 강대국인 미국, 中國, 소련에 각각 균형된 입장을 취하는 정책을 폈았다. 둘째, 타이는 인도지나 문제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공산체국들과 관계증진을 꾸준히 폐하면서 베트남의 패권주의와 공산주의의 위협에 대처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ASEAN 제국의 결속을 다시는데 앞장서 오고 있다. 셋째로, 방콕당국은 군사 및 경제적 측면에서 미국 측과 내면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추구함으로써 국방력을 증강하고, 만약의 경우 강대국 관계가 혼들리거나 지역균형이 깨어질 시는 미국의 방위우산에 의지하려는 정책을 견지해 오고 있다.

VII. 결 론

1. 전 망

〈정치적 전망〉

타이랜드의 정치와 사회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두개의 상이한 모습으로 평가된다. 한편에서 보면 타이 정치는 각종 세력들을 잘 조화시켜 매우 실용적이고 안정된 정치체제를 이루고 있으며 주민의 욕구를 비교적 착실하게 충족시켜 나가는 정치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나라의 정치는 폐쇄적이고 엘리트 중심적이며, 관료적 병폐와 부패가 심할뿐 아니라 빈곤과 도시집중의 모순이, 그리고 경제적 격차와 불평등이 만연하여 장래가 극히 불확실한 사회로 보이기도 한다. 이 두 관점은 다 같이 이 나라와 사회의 양면적인 모습을 잘 대변해 준다.

군주제의 오랜 전통, 과도한 욕구 분출을 자제시켜 주는 불교문화, 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관료체제, 군대가 떠 받치고 있는 정권, 번창일로에 있는 경제 등은 이 나라를 매우 차분하고 안정된 변화를 이루어 나가는 정치 체제로 보이게 한다. 흔히 보는 제3세계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이 나라의 국민들은 기본적인 사회제도와 권력체제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어 이 또한 안정과 발전에 커다란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타이랜드에는 과거처럼 고질적인 군부쿠데타나 폭력에 의한 정치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도 확실히 전보다 안정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또한 타이랜드의 정치안정과 경제적 번영은 그 자체가 불안정요소를 배태하고 있어 다른 제3세계 나라들과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다. 군부의 헤게모니 정치와 권력의 집중화는 국민참여, 정당정치, 선거과정 등 정상적인 민주절차의 육성과 발전을 더디게 하고 있다. 정치변동은 민주적 참여와 합리적 정책결정으로 오기 보다는 관료적 전횡과 군부지도자들간의 탐욕 및 갈등의 산물로 나타나기가 일수다. 군부와 민간집단간의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계임의 틀이 부재한 가운데서 학생, 기업집단, 노동조합등 새로운 사회세력의 수와 목소리는 날로 증폭하고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하원의 권한이 약해 입법부가 약체조직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관료 및 군부지배형 정부의 안정이 과연 성장가도에 있는 경제

와 점증하는 국민의 요구를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수렴해 나갈 수 있을지 는 아직 미지수이다.

지난 1988년 8월 타이랜드에는 프렘(Prem) 수상의 침략에 이어 쳐티차이(Chatichai Choonhavan) 수상이 이끄는 새로운 6당 연립정부가 들어섰다. 프렘 전 수상은 집권기간동안 군부를 등에 업은 정치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가져왔으나 민주정치를 육성하는 데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 새 수상은 타이의 정치를 관료지배로 부터 서서히 선출된 민간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는 정치로 바꾸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당연립체로서의 기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신 정부로서는 군과 민간간의 힘의 균형을 회복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사회집단들의 개혁 욕구를 제도권 정치로 수렴해 가는 일이 감당하기 벅찬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다.

타이랜드의 정치가 민주화를 향해 일보 전진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군부가 과거의 정치적 탄생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 군부는 공공연히 민간정치인들을 무시하고 불신해 왔다. 이러한 풍조 뒤에는 군부만이 나라를 구하고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만심 뿐만 아니라 군은 원하기만 하면 언제라도 민간정부에 간섭하거나 그 지도부를 갈아치울 권리가 있다는 환상까지 심어주었다. 그러나 최근 타이랜드에는 민간부분과 사회세력이 국가기구에 대하여 과거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견제력을 행사할 만큼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따라서 하루빨리 군부가 스스로 변신하지 못하는 한 조만간 군과 사회의 충돌은 폭발적 양상을 띠게 될 우려가 없지 않다.

〈경제적 전망〉

타이랜드는 최근 2~3년간 빠르고도 지속적인 경제성장가도를 달려 한국, 대만, 싱가폴, 홍콩에 이어 아시아 제5의 신흥공업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랜드는 경제개발의 새로운 모델로 다른 나라들의 주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대만, 한국 등 신흥공업국들로부터는 해외투자와 생산기지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다.

1987년 한해동안 타이정부의 투자국에는 건수로 1천건이 넘고, 금액으로는 83억불에 달하는 외국인 투자신청이 접수되었다. 1988년에도 약 1,400여 개의 신규투자가 허가되어 금액 상으로는 1,900억 바트(Baht)의 투자를 기록하였다. 이 중에서 700억 바트는 일본계 자본이었으며, 200억 바트는 대만계 자본으로 집계되었다.⁽⁸⁾ 한국으로부터의 투자신청도 크게 늘어났다. 특

히 1988년은 타이 경제의 황금기로 표현될 만큼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활발하였다.

1970년대 말까지만 해도 이 나라의 경제는 발전의 희망이 크게 없는 것으로 인식되었었다. 그러나 프레행정부는 민간부분을 개발의 주동력으로 삼아 사기업을 활성화시키고, 초기 재정정책과 바트화의 지속적 평가절하를 고수하는 등으로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였다. 물론 정치적 안정과 더불어 노사관계의 안정도 경제개발의 성공에 크게 기여하였다. 타이경제의 호조는 그 외에도 유가 인하, 국제금리 인하의 기회를 잘 포착하고, 급증하는 관광수입과 해외근로자들의 송금 등에도 힘입은 바 컸다.

외국 투자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 정부의 지원정책 및 정치적 안정 등을 주요 투자요인으로 든다. 더구나 이 나라에는 하루 평균 3달러의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일에 충실하고 기능수준이 높은 노동력이 있다는 사실이 외국인 투자가들의 첫번째 매력으로 손꼽힌다. 일본, 대만, 싱가폴의 인건비가 상승한데다 한국의 임금경쟁력이 약해짐으로 말미암아 타이의 값싼 노동력은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만약 타이 정부가 지금까지와 같이 경제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치안정과 노사관계의 평화를 지속한다면 이 나라의 경제는 멀지않아 선발 NICs 국가들을 따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타이경제는 성장에 따르는 구조적 모순과 문제점도 동시에 안고 있다. 수출지향적 산업발전은 경제의 외부의존과 노출현상을 높혔을 뿐만 아니라 산업부문간의 격차를 벌려놓고 지역 간의 불균형성장을 야기시키기도 했다. 더우기 타이의 경제성장은 정치체제의 과도기적 안정에 그 안정기조를 크게 의존하는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점증하는 노동조합, 농민조직 진보세력들은 이러한 불평등 현상에 대해 보다 높은 목소리로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성장과 개혁을 동시에 이루고자 하는 현존 경제정책이 과연 얼마나 성공할 것인가는 앞으로 좀더 두고볼 일이다.

〈외교적 전망〉

강대국을 상대로 한 타이외교의 기조가 “동거리정책”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미국이나 중국과에 관계에 비해 소련과의 관계는 다소 소월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타이랜드는 대소련정책에서도 새로운 관심을 표명하고 있

(8) FEER 1989년 1월 12일자 참조.

다. 그 배경에는 무었보다도 먼저 소련이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정책을 추구하고, 캄보디아 문제해결등에서 유화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한데서 비롯되었다. 둘째로 타이는 중국과 너무 가깝다는 국내외의 비판을 무마하자는 의도에서도 대소련관계를 재정립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 셋째 타이는 미국의 보호주의를 의식하여 동구제국을 비롯한 공산권과의 경제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도 소련과의 접근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소련에 대한 타이의 이러한 관심은 1987년 5월 Siddhi 외상(Siddhi Sawetsila)이 처음으로 소련을 방문함으로써 구체화되었고 그후 여러 방면으로 교류와 접촉을 확대해 가고 있다.

지역내의 문제에서 타이는 그동안 ASEAN 각국을 캄보디아문제에 대하여 통일된 입장으로 유도하는 일에 외교정책의 기조를 두어왔다. ASEAN 제국은 지금까지 캄보디아문제에서 베트남과 가장 적접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타이 입장에 대하여 대체로 동조와 지지를 보내왔다. 타이랜드가 베트남을 의식하여 중국에 밀착하려는데 대해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가끔 비판과 의혹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두 나라는 ASEAN의 연대관계가 보다 중요하다는 인식때문에 인도지나문제에서는 타이의 입장을 존중해 왔다.

지역외교에 대한 타이랜드의 정책은 최근 소련이 캄보디아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베트남의 철군계획이 현실화됨에 따라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소련의 권유에 따라 베트남은 1988년에 캄보디아로부터 5만의 군대를 철수시켰다. 또한 소련은 중국과 양국 외상간이 합의을 통해 캄보디아에 잔류하는 베트남군대를 1989년 말까지 완전 철수시키기로 한바 있다. (FEER, 1989. 1. 12) 최근에는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철군하는 등 캄보디아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타이랜드는 대ベ트남 강경노선을 수정하는 한편 인도지나제국과의 관계도 개선하기 위해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Siddhi 외상은 1989년 1월 하노이를 방문하여 캄보디아 문제의 조기해결을 촉구하고 타이·베트남 관계를 조속히 정상화시키려는 노력을 과시하였다. 1978년 베트남이 캄보디아를 침공한 이래 냉각되어왔던 타이·베트남 관계에는 현재 화해기운이 돌고 있다. 타이는 캄보디아에 중립적이고 독립된 정부가 수립되어 이웃인 타이에 위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2. 한국과 타이랜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는 장차 한국과 타이랜드가 기존의 우호관계를 보다 돈독히 하고 상호신뢰와 협력을 증진시키는데 상당한 의의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첫째, 한국과 타이랜드의 관계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에서 각기 중견 개발도 상국으로서 갖는 공통성과 더불어 오랜 세월에 걸친 역사적·문화적·민족적 자부심에서 오는 친화성에 크게 바탕을 두고 있다. 타이랜드는 동남아에서 한국과 가장 오래되고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온 나라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우호관계는 양국이 공유하고 있는 강력한 반공의식에도 크게 기인했다. 따라서 앞으로 타이와의 협력은 이와 같은 자부심과 상호신뢰, 공통적인 문제의식들에 기초를 두고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오늘날 타이랜드가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큰 이유는 이 나라의 경제가 제3세계의 새로운 개발모형으로 꼽힐 만큼 빠른 성장과 견실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개발경험에서 타이랜드보다 한걸음 앞선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 점에서 타이의 지도자들이나 국민들은 한국에 대하여 친근한 인상과 매력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국가건설과 경제개발과정에서 경험한 시행착오와 교훈을 이 나라와 나누어 가짐으로써 그 협력기반을 크게 다질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한국이 타이와의 협력관계에서 경제적 이득에만 눈이 어두운 인상을 피해야 한다. 우리는 이 나라가 한국에 대하여 갖는 관심과 동기가 일본의 경제적 침투와 애속의 위험을 분산하려는데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한국과 타이랜드의 경제 협력관계는 역사, 사회, 문화 및 경제적 안목과 충분히 조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가야 할 뿐만 아니라, 경쟁과 마찰을 가능한 한 피하고 상호 보완체계를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한국과 타이랜드는 다 같이 산업화과정에 따르는 과도기적 소요와 정치불안의 소지를 안고 있음은 물론 특히 민주화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 지금 타이랜드의 지도층과 지식인, 학생, 노동자들은 모두 한국의 민주화과정과 그 추이에 대하여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다. 장기적 안목으로 보아 한국과 타이랜드 관계는 두 사회가 다 같이 민주주의의 목표를 향해 전진해 가는데 저해되지 않는 양식과 방법으로 협력방안을 모색해 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양국은 기업인, 지도층간 교류뿐만 아니라 노동조직 학생 등의 교류쪽도 넓힐과 동시에 도시화, 빈민 문제 등 두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모순들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상호협력과 접촉의 폭을 더욱 넓혀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현

Bunbongkarn, Suchit

1987 *The Military in Thai Politics, 1981~1986*.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Bunge, Frederica M., ed.

1981 *Thailand: A Country Study*, Foreign Area Studies, The American University, Area Handbook Series.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Chai-Anan Samudavanija

1986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in Thailand: Continuity and Change," Robert A. Scalapino, Seizaburo Sato, and Jusuf Wanandi, eds, *Asian Political Institutionaliz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241-260.

1987 "Political History" in Somsakdi Xuto, ed.,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

Chaiprasop, Ruangthong

1988 "The Thai Economy in 1987: An Overview,"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87-294.

Dhiravegin, Likhit

1987 "Thailand," Chung-Si Ahn, ed., *The Local Political System in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137-172.
Far Eastern Economic Review.

Huntington, Samuel P.

1968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y*.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Neher, Clark D.

1988 "Thailand in 1987: Semi-Successful Semi-Democracy," *Asian Survey* Vol. XXVIII, No. 2 (February, 1988): 192-201.

Perlmutter, Amos

1977 *The Military and Politics in Modern Tim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ajah, Ananda
1987 "Thailand in 1986: Change and Continuity, Yet again," *Southeast Asian Affairs*, 1987.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307-326.
- Riggs, Fred
1966 *Thailand: The Modernization of a Bureaucratic Polity*.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 Snitwongse, Kusuma
1987 "Thailand's Year of Stability: Illusion or Reality?" *Southeast Asian Affairs*, 1988.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269-286.
- Tongdhamachart, Kramol
1982 *Toward a Political Party Theory in Thai Perspectiv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Occasional Paper No. 68. Singapore: Maruzen Asia.
Xuto, Somsakdi, ed.
- 1987 *Government and Politics of Thailand*, Singapore: Oxford University Press.